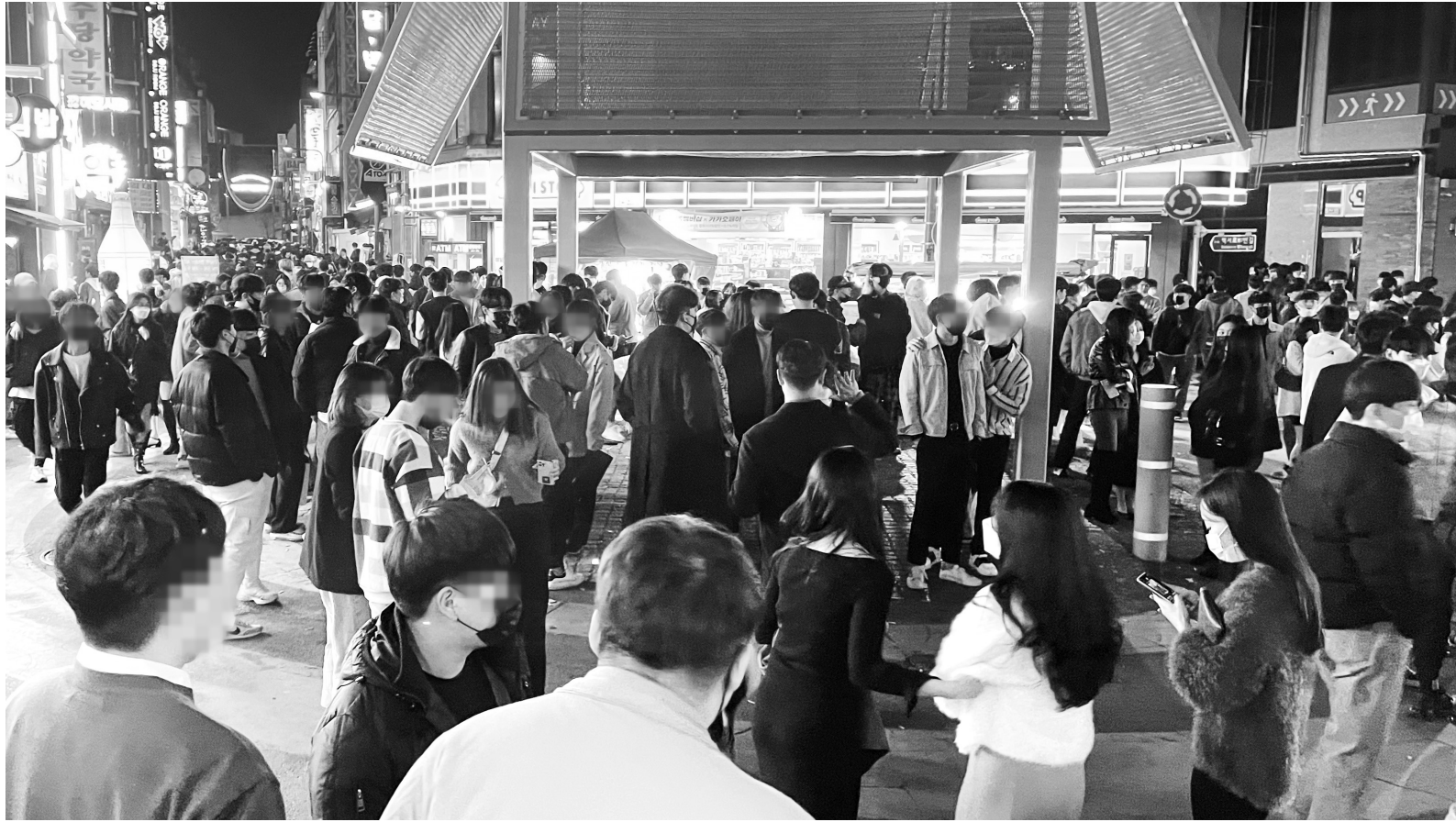


# 풀린 영업제한...방역 경각심 풀어질까 우려

광주 등 비수도권 오늘부터 1.5단계

설 연휴 구시청·상무지구 불야성 젊은이 몰리며 주점 앞 줄서기 재현 마스크 미착용 등 곳곳 방역 위반도 방심 이어져 코로나 재유행 불식 완화 취지 살려 방역 준수해야



설 연휴인 지난 13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에는 식당과 술집들이 영업제한으로 문을 닫자 술집을 나온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귀가하지 않고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설 연휴인 지난 13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와 서구 상무지구 술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코로나 사태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데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이후 사라졌던 '주점 앞 줄서기' 풍경도 다시 재현됐다.

술집 안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무색할 정도로 8-9명씩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앉아있는 손님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입장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업소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은 여전했다.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술집에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로 구시청 사거리 일대가 북적였다. 이들은 영업이 끝난 술집 앞을 한동안 서성였다.

구시청을 찾은 정모(26)씨는 "친구들과 같이 설 명절을 맞아 나왔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된다고 하니 모처럼 친구들과 나왔는데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상무지구 일대 주점들도 빈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급장전문점의 경우 오후 7시께 부터 늘어난 20-30대 젊은층들의 긴 줄로 입장하

는데만 30분 이상 걸렸다. 주말인 14일에도 담양군 죽녹원 일대와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은 이동 자체 요청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던 조치라는 게 광주시 등 방역 당국 입장이다.

하지만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자칫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날씨가 풀리면서 감염 우려가 높은 3월(밀집·밀폐·밀접) 환경은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방역에서는 역시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완화 조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고자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지만, 시민들의 자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감염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했지만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두환 항소심 관할 이전 대법원 "광주고법 소관"

전두환(89)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관할이 서울로 옮겨 열 지를 광주고법이 판단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전씨측이 신청한 관할 이전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씨측은 지난달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씨측이 관할 이전을 신청한 사건은 광주시법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이 해당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라며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고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한 뒤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역시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피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화물차 치어 2세아 사망사건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한다

8.5t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 현장 방문 재판부가 직접 찾아 검증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오는 3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기소된 A(56)씨 사건의 현장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벽산블루밍 1단지 정문 앞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직접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측 주장을 감안,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난 잘못을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건너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차량 높이로 인해 바로 앞에서 있는 피해자들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돈 받고 내사 종결...경찰 수사종결권 보완 시급

목포·광주서 경찰 탈선 잇따라 광주경찰 한달간 31% 자체 종결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절도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전남 목포경찰서 B 경위는 지난 2018년 4월,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 신문조사까지 작성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음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처리했다. B 경위는 내사 종결을 하더라도 검사에게 제출해야할 관련 서류와 증거물도 남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척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적어넣는가 하면, '오인신고'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까지 피해자에게 받아냈다.

B 경위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받던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따라 이같은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수사종결권 시행 이후 얼마나 자체 종결했는지 구체적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1월 한 달간 329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31%인 1031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전체 사

건의 58%인 1920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검증할 방안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고발인들이 자체 종결한 수사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한 건 수도 6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형사 사법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 조정의 이뤄진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허위 전입 신고 한 뒤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3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남구 덕남동 임야, 지분매매
  - ▶ 광주대 지나서 전남대병원 근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합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 64-21번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됨
  - ▶ 평당 20만원씩 300평 이상 매매함
- 문의. 010-3605-50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